

광주 우치동물원, 광주·전남 동물원 협력체계 강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우치동물원에서 광주·전남지역 12개 민간·공영 동물원, 동물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거점동물원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우치동물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 등을 공유, 권역 내 동물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광주전남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 논의에 그치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현장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전남지역 민간·공영 동물원과 전남도 동물관련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우치동물원은 참석자들에게 ▲전문진료체계 구축 ▲멸종위기종 구조·보호 ▲종 보존 연구 ▲동물복지 상담(컨설팅) ▲시민 인식개선 활동 등 국가 거점동물원으로서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의료·연구·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권역 단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동물복지 전국적 현안인 '사육곰 전면 금지'에 따른 사육곰 현황과 실태, 과제 등을 공유하고, 우치동물원 진료팀이 최근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한 '베트남 곰 보호센터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우치동물원은 현재 사육곰 4마리를 관



거점동물원 운영 설명회... 지역 12개 동물원 참여 동물 질병 관리, 긴급보호·치료·재활, 종 보존 등 지원

리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2마리를 입식할 예정이다. 우치동물원은 사육곰 입식·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파리 방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우치동물원 동물병원시설도 견학했다. 수술실과 영상진단실을 비롯해 이동식 의료장비(X-ray, 초음파, 내시

경), 혈액검사 장비 등 전문 수의진료 기반 시설을 살펴보고 거점동물원으로서 의료 지원 역할을 확인했다. 이들은 실제 회진에도 참여해 동물 관리환경과 운영체계를 공유했다.

우치동물원은 지난해 6월30일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돼 광주·전남·전북·제

주 등 호남권역 25개 동물원을 대상으로 질병 관리, 긴급보호·치료·재활, 종 보존 및 증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우치동물원은 야생동물 치료와 보호를 아우르는 공공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광주·전남 통합에 맞춰 지역 동물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권역 전체의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높이는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광주교육시민연대가 6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청취안 원안 가결(동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행정통합의 찬반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의회의결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광주교육시민연대, 시의회 행정통합 동의 효력 정지 신청 헌재에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심판도 청구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행정·교육·재정 체계, 생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으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숙의와 청원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4일 의결 하루 전 특별법안이 공개돼 시민들이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연대는 "의견청취안 의결은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 의견수렴 완료의 근거로 작동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의회는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시민연대는 "그동안 교원단체들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

교 등 교육특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 의견청취 의결 과정에서 해당 교육특례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시민연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행정통합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이러한 권리가 배제된 의사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월 목포시노인복지관과 세한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어르신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월 3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또 8일과 22일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20일 해남군 장등경로당, 25일 영광군 대마면사무소에서 어르신과 외국인 주

전남자치경찰위, 도민 안전의식·범죄예방 역량 높인다

12명 전문 강사진 참여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 운영

민, 이장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은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 예방, 교통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어르신과 외국인 유학생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눈높이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중 진행되는 찾아가는 자치경찰 안전대학은 전·현직 경찰관 중에서 선정된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강사로 참여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한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

한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자치경찰 안전대학에는 한 해 동안 도내 13개 시군 지역에서 16회에 930여 명이 참여했다. 강의료는 무료며, 교육을 희망하는 20인 이상의 도민이나 기관·단체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송현근 기자



전남교육청, '행정업무 경감' 체계 구축 '학교종합지원센터장 협의회' 열고 현장 중심 실행 방안 논의

전라남도교육청(교육청 김대중)은 2026학년도 학교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전담 조직 신설, 행정업무 경감 과제 추진 등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수업에, 학생은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 도내 18개 시군 학교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 본청 내 '학교행정업무개선팀' 신설 ▲ 행정업무 경감 과제 23건 지정 등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조직과 정책 기반을 새롭게 정비했다.

또한 학교업무지원협의체 운영, 센터장 간담회 정례화, 현장 모니터링단 구성, 타 시도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피드백 체계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5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6 학교종합지원센터장 협의회'를 열고, 2026학년도 행

정업무 경감 추진계획과 주요 과제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특별교실 정비 인력 지원 ▲ 학교 폐기물 처리 ▲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및 보조인력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 학교 CCTV 운영·관리 등 중점 과제의 실행계획과 추진 과정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학교종합지원센터장들은 "학교 규모와 여건이 다양한 만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인출 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기타 보조인력 매칭방안'도 소개됐다. 전남교육청은 자원봉사 형태의 보조인력을 인출교사와 매칭해 학생 안전을 지원하고, 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체계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전남도,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강화·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정책 간담회서 주요 핵심사업 공유·추진방안 논의

전라남도는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숲속교육관에서 도·시군 보건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지난 5일 열며 핵심 사업을 공유하고 시군별 주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2026년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 취약지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보건의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보건기관 기능 개편과 비대면 진료, 원격협진을 적극 활용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대비해 보건소가 지역 내 재택의료와 돌봄 연계를 총괄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도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

속해서 받도록 준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남형 치매관리체계 고도화,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감염병 예방접종과 감시체계 강화,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도 중점 추진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들이 체감할 실효성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군 보건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전남형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민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